

남북 단일시장 구축의 장애 요인과 그 극복방향

조남훈 |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chonh@kida.re.kr

단일시장에서 거래되는 동일한 재화 또는 서비스가 서로 다른 가격을 가질 수는 없다. 왜냐하면 동일 재화의 가격이 다를 경우 가격이 싼 곳에서 재화를 구입하여 비싼 곳에 판매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거래를 차익거래(arbitrage)라고 부르는데, 단일시장에서 거래되는 동일한 재화는 차익거래가 존재하는 한 같은 가격을 가질 수밖에 없다. 시장 내 가격차이가 존재하는 한, 계속 발생할 차익거래가 결국에는 시장 내의 재화가격을 동일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같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같은 재화의 가격은 원칙적으로 동일해야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익거래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몇 가지 요소가 현실 세계에 존재한다.

첫째는 수송수단의 미비이다. 만약 효율적이고 값싼 수송수단이 존재하지 않아 두 지역 간의 수송비용이 양 지역에서 거래되는 재화의 시장가격 차이를 상쇄시키지 못한다면 차익거래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그 결과 두 시장에서 재화의 가격 차이는 여전히 존재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제약요인은 재화시장만이 아니라 자본시장에서도 발생한다. 만약 서로 다른 두 시장 간에 통신비용과 같은 거래비용이 금융상품의 시장가격 차이보다 더 커서 차익거래를 불가능하게 만든다면, 두 시장은 단일시장으로 통합될 수 없을 것이다.

둘째는 불완전하거나 비대칭적인 정보의 존재이다. 단일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정보의 공유가 가능해야 한다. 단일시장에서는 모든 수요자와 공급자가 상품 특성 및 수급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해야만 차익거래를 실현시킬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차익거래는 금융자산처럼 실물이 직접 거래되지 않는 자본시장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다.

셋째는 서로 다른 제도이다. 단일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시장가격을 다르게 만들 수 있는

제도적 차이가 없어야 한다. 즉, 관세 및 비관세장벽 등과 같은 제도적 차별요인이 없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단일시장 구축을 막는 이러한 요소들은 현실 세계의 이곳저곳에 존재한다. 따라서 거리가 떨어져 있고 서로 다른 국가에 속한 두 개의 경제권이 단일시장을 형성하기는 결코 쉽지 않다. 더군다나 효율적인 단일시장 형성을 위해서는 단일화폐 사용이 효과적이라는 점에서, 서로 다른 화폐를 사용하는 두 국가가 단일시장을 이루는 것은 매우 어렵다. 국가적 차원에서 단일시장에 가장 근접한 유럽연합(EU)이 시장을 현재 수준으로 통합하는 데에 상당 기간을 소요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남북이 단일시장을 형성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남과 북이 같은 언어를 쓰고 과거 한 국가였다고 할지라도, 경제적 조건이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남북 단일시장의 형성을 바라기는 힘들 것이다.

단일시장은 생산요소 또는 최종생산품 단위에서 부분적으로 형성될 수 있다. 반면에 국가 전체 수준에서 형성될 수도 있는데 여기에는 제품시장, 노동시장 및 자본시장 등이 포함된다. 그런데 시장의 통합은 통상적으로 제품시장 통합이 가장 용이한 반면, 노동시장 및 자본시장의 통합은 상대적으로 까다롭다. 특히 북한에는 자본시장이 없기 때문에 남북 간의 자본시장 통합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용이한 재화시장의 통합은 어떤 요건, 단계, 그리고 제도적 보완을 거쳐서 실현될 수 있을까? 가장 필요한 것은 시장에 대한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시장에 접근할 수 있어야지 차이거래가 발생하고, 그에 따라 단일시장화가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그것이 꼭 오프라인상에서만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온라인상에서도 시장에 대한 접근이 허용될 수 있다.

그런데 현 상황에서는 남과 북의 재화시장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이 허용될 수 없다. 그러므로 우선 시범적으로 재화거래가 가능한 시장을 개설하는 것이 중요하다. DMZ를 포함한 접경지대에 자유로운 거래가 가능한 시장을 개설함으로써 시범적 시장의 역할을 수행하게끔 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시장이 좀 더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시장보다 대규모의 거래가 허용되는 도매시장의 모습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장의 개설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물리적·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시범시장에 이르는 교통수단이 확보되어야 하고 수송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하며 가격정보의 유통과 확산을 위한 통신체계도 확보되어야 한다. 거기다가 세금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간 협정도 필요할 것이며 시장거래가 물물교환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대금청산 제도도 필요할 것이다.

특히 앞서 말했듯이 단일 통화가 통용되면 더 좋겠으나 그렇지 않더라도 단일 통화 대신에 사용될 효과적인 거래수단이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거래와 관련된 여러 가지 보상규정 및 패널티 등과 같은 거래 관련 제도 및 분쟁해결 절차 등도 구비되어야 한다.

이러한 시범적 재화시장이 성공적으로 운용된다면 다음 단계의 통합시장은 좀 더 넓은 범위에서 운용될 수 있다. 시범지역에서의 시장운용 경험은 한반도 차원에서 시장을 운용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특히 제한된 지역, 즉 접경지역이라거나 특구 등에서의 자유로운 제품거래는 남북 통합시장의 운용을 위한 필수 요소이다. 예를 들면 북한 경제특구지역이나 향후 건설될 남한의 통일특구지역 등에서 통합시장이 운용된다거나, 나아가 한반도 전체에서 통합시장이 운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재화시장이 어느 정도 확산되면 대규모 공업제품에 대해서는 기업과 기업이 직접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을 개설하여 운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단순 제품거래만이 아니라 합작투자 및 기술교류 등 다양한 형태의 거래가 가능할 것이다.

한편, 이러한 단일 제품시장 구축이 어느 정도 활성화되면 남북간에 단일 노동시장 구축도 고려해 볼 만하다. 그런데 단일 노동시장의 구축은 단일 재화시장 구축보다 더 어려울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북한 노동자들의 이동이 제약되기 때문이다. 북한 노동자가 남한지역에서 노동을 제공할 경우 그 활동은 제약받을 수밖에 없다. 북한 당국이 북한 노동자의 남한 지역 내 자유로운 활동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북한 인력은 북한 지역이나 접경지역 등의 제한된 구역에서만 노동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국 노동인력의 북한 지역 취업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남북한 임금 차이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한 전문인력의 제한적 취업은 가능할 수도 있다. 따라서 지역적 특성과 노동 인력의 성격을 잘 고려한 제도가 구축된다면 남북은 하나의 노동시장을 형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일 노동시장은 통합적 차원의 노동시장보다는 전문노동인력시장이나 단순노동인력시장 등의 분화된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단일 노동시장 역시 환경적·제도적 측면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지닌다. 최저임금이나 노동시간의 제약 등이 그러한 문제이다. 이러한 제약을 고려할 때 남북한이 단일 노동시장을 운용하기는 힘들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노동인력 공급 차원에서 접경지역에 위치한 노동시장 정도는 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노동시장이 단일시장이 될 수 있을지는 확신할 수 없다. 왜냐하면 접경지대에 노동시장을 개설한다고 할지라도 생활수준이 서로 다른 남한과 북한의 노동자가 동일한 노동을 제공한다고 해서 동일한 임금을 지급받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노동시장

은 노동의 질과 노동자의 출신지역 등에 따라 계층적으로 분화될 가능성이 높다.

하나의 노동시장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북한 노동인력에 대한 이동성 확보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현 상황에서 이는 실현 불가능하다. 따라서 단일 노동시장 구축은 먼 장래의 일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남북 시장의 단일화는 시장의 종류 및 발전단계에 따라 천천히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경제협력, 북한 지역 인프라 건설, 남북 경제제도 통합 및 관세철폐 등은 남북 단일시장 발전을 촉진시키는 촉매제의 역할을 할 것이다.